

3

Mar 2018
No.6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이슈진단

'First in-Last out'의 건설산업이 바라보는 남북 경협 전망 및 대응 전략
근로시간 단축, 건설기업만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구원소식

건설정책연구원 · 대한건축학회와 MOU 체결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새로운 건설산업의 비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입니다.

남녘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과 향긋한 꽃내음이 새 생명을 움트게 하는 계절의 여왕 봄입니다.

지난 겨울, 마치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몰아치던 한파도 계절의 변화를 속일 수 없는지 남녘은 봄의 전령사인 목련꽃과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과 함께 협회는 대내외 고객에게 친절한 응대가 기본이 되어 회원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일거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존립기반이 회원사에 있고 회원사가 내민 손을 협회가 따뜻하게 잡아줌으로서 진정한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도회 회장과 업종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1대 집행부는 중앙회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목소리를 내어야만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회는 “대통합”을 통한 회원사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자 오는 4월 10일 ‘한마음 대행진’이라는 행사를 통해 “시공참여자제도 부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의무화”, “소규모 복합 공사 범위 상향”, “불필요한 건설규제 폐지”, “건설 부조리 및 불공정 행위 근절”등 우리 전문건설인들의 숙원사업과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내외에 알리려 합니다.

안 될 것이란 전제를 두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협회가 추진해야할 현안사업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류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나간다면 회원사가 절실히

바라는 바를 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협회는 회원사의 오아시스가 되어야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정말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전문건설업계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노선에 따른 관세폭탄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OC사업의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경기 둔화는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회는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융합과 창조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의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어둠속에서도 희망을 불씨를 머금고 있다 봄 햇살에 조용히 기지개를 펴는 새싹처럼, 우리 전문건설업계에도 인고의 긴 터널을 벗어나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우리 가슴속에서 조용히 움터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First in-Last out’의 건설산업이 바라보는 남북 경협 전망 및 대응 전략

홍성진 책임연구원(hongsj@ricon.re.kr)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양상이다. 남측 대북특사단은 3월 5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6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및 전략도발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한 합의안에 대하여 신뢰의 문제는 남아있으나,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는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양태(樣態)는 종래 진행되었거나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과 연계될 수 있는바,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남·북한 경협에 있어 ‘First in-Last out’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신경제지도에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로 구성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성공 여부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에 포함된 ‘개성공업지구’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화해협력과 통일의 경협 모델이자 남·북한 신뢰의 상징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 없이 다른 경협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견지망월(見指忘月)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개성공단 3단계 확대를 내세우고 국정추진과제로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부지조성공사의 시작(First)과 유지·보수 공사의 마지막(Last)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2016. 2. 10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응하여 개성공업지구를 갑작스럽게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설기업은 불측(不測)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개발계획의 수정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총 66.1km²(2,000만평) 규모로 공장 구역 26km²(800만평)과 배후도시 40km²(1,200만평)의 토지를 북한이 남한에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이 가운데 공장구역은 1단계 공단, 2단계 생활·상업·관광지역을 포함한 수출기지, 3단계 생활·상업·관광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거점으로 계획하였는데, 현재의 개성공업지구는 1단계(약 100만평: 3.3km²)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1단계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근로자 약 5만 5천명을 고용한 상태로써, 개성시 전체 인구 약 30만명으로 추정하여 볼 때 개성시의 노동가능인구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시 인근 도시(ex: 해주)를 주거·상업·공업·정보통신·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의 개성공업지구 인근 지역(ex: 파주)을 물류단

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참여 기업의 재산권 보전이다.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과 투자의 지원, 출입·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에 관한 일련의 법적 절차가 흠결되어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참여한 기업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교역·경협보험에 따른 보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는 총액한도가 7천억원, 기업별 한도가 70억, 부보율 90%, 보험요율이 0.5~0.8%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참여 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남북건설협력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고정자산 등 회수가 불가능하여 수용에 가까운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설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는 초기의 개성공업지구에서 다른 참여기업의 '선행적 성격'으로 인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개발과 투자의 지원, 출입·체류·거주, 조세 등의 제한이 있었다. 오늘날 종합건설업체는 남·북한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부대적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협력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실제 시공의 주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건설인력 수급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확대(종래의 개성공단 유지·보수, 북한의 도시개발, 남한의 물류단지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건설기업만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2013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5년 만에 이루어진 타결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주일의 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등 모든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단, 이러한 변화가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예외로 종업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주당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기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는 민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사실상 무제한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여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5종만 유지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일본(1,730시간)과 비교해도 15%이상 많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월급제 고용이 아닌 일당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현행 제도대로 도입되면 건설근로자는 주 52시간만 작업할 수 있어 작업시간이 축소되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건설업체는 가뜰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기 부족과 공사비 증가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측면에서도 작업 중단 빈도가 늘어나고 시공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미봉책이 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앞장서서 공기와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연장과 그에 따라 늘어나는 간접노무비, 임차료, 보험료, 일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증액해주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도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건설정책연구원·대한건축학회와 MOU 체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대한건축학회(회장: 하기주)와 2월 28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분야의 상호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MOU)을 통하여 양 기관은 △ 건축도시·건설분야 정부정책 지원 및 상호 기술교류, △ 건축도시·건설분야의 제도 및 정책 개발, △ 연구 및 기술 관련 정보 공유, △ 연구 인력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수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명교 원장은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한건축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적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한국의 건축도시·건설분야의 제도 및 정책개발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서명교 원장)은 14일(수) 오전 10시 삼정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축사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업역과 체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부 정책에도 유익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향」을, 손정욱 이화여대 교수가 「융·복합 시대의 전문건설업 종 경직성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종광 연구실장은 국내외 건설시장 성장 정체,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등의 환경변화로 건설산업에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설생산체계 변화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설생산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주요국가의 건설생산체계,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발표에서 손정욱 교수는 현행 전문건설업 시장 현황과 업종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문건설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융·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김수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이영남 前 지에스건설(주)부사장 △김응일 서천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준 방림이엘씨(주) 대표이사 등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업역구조를 개선하여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건설생산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명교 원장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산체계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그리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한 건설생산체계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